

## ■ 광주·전남 오는 공공기관 이전효과는?

# 직원 4,700명 유입·稅 수입 年 220억

한전 생산유발 年 911억...전남은 한전KDN·농산물유통公 '알짜'

◇광주=한전 본사와 한전기공·전력거래소의 지난해 지방세 납부액은 총 197억원, 이전인구는 총 1천577명이며, 예산은 30조 2천81억원 규모다.

광주시가 분석한 이를 3개 기관의 이전에 따른 단계별 지역 과급효과는, 향후 1~3년 동안 ▲생산유발 911억원 ▲부가가치유발 440억원 ▲고용유발 881명, 본격 이전이 추진되는 4년차 이후 ▲생산유발 3천73억원 ▲부가가치 유발 2천348억원 ▲고용유발 2천815명이다. 이중 이전인구는 직원 수만 계산하면 1천577명이지만 동반가족을 감안하면 장기적으로는 4천700여명이 광주로 유입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전은 관련 10여개의 자회사 또는 계열사 등이 본사와의 업무협의를 위해 본사 소재 지역에 출장소 등의 조직을 설치하는 것을 비롯, 지사·협력업체 등의 빈번한 본사 방문을 감안하면 광범위한 과급효과 예상된다.

◆전남=전남도는 15개 기관의 전남이전으로 인한 과급효과를 아직은 구체적으로 분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15개 기관 본사 직원수가 3천158명에 지난해 기준으로 연간 지방세 납부액이 26억원 100만원이란 점을 들어 이만큼의 인구 유입 및 지방세 세수확보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는 전남도가 당초 기대한 것에 비해 3개 기관에 직원수는 300명 가량 증가했지만 지방세 수입면에서는 4분의1 수준에 그쳐 과급효과에서 '속빈 강정'이라는 지적도 받고 있다.

농기공을 제외한 기관별 과급효과를 보면 무엇보다도 한전 자회사인 한전KDN이 눈에 띈다. 지난 92년 창립돼 현재 자본금 1천억원에 지난해 3천855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본사 직원 715명을 포함해 전국 26개 사업소에 1천220명이 재직중이며

지방세 납부액이 26억원 100만원이란 점을 들어 이만큼의 인구 유입 및 지방세 세수확보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는 전남도가 당초 기대한

아 농수산 도인 전남의 농수산물 수출 및 유통망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제적 경쟁력을 가진 고품질 문화콘텐츠를 제작·공급하고 있는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은 3분부 13팀으로 본사 직원이 52명에 불과하지만 문화예술분야에서는 핵심 기관으로 꼽힌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도 국내 연금공단의 주요 사업자로 운영 기금이 막대하고, 국내 문화예술의 연구 지원업무를 하는 한국문화예술진흥원도 본사 직원이 150명으로 문화예술기관으로 규모가 커 지역내 과급효과가 기대된다.

이밖에 본사 직원이 350명인 정통부산하 지식정보센터는 정보시스템 고도화 등 정통부의 업무 전산화사업을 총괄하고 있으며, 전파연구소는 전자제품의 전파안전 인증업무를 맡고 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채희증기자 chae@kwangju.co.kr

## 광주, 내달 한전과 '이전추진협' 구성

# 전남, 9월 말까지 이전 협약 체결키로

市·道 공공기관 이전 후속 대책 마련

광주시와 전남도는 정부의 공공기관 배치 확정에 따라 '이전추진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후속 대책 마련에 나섰다.

광주시는 오는 7월말에 한국전력공사와 공동으로 이전추진협의회를 구성, 상호 협의를 거친 뒤 8월말에 중앙정부·광주시·한전간 이전 협약을 체결할 방침이다.

이어 9월내에 전남도와 공동으로 혁신도시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11월말까지 혁신도시 입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광주로의 이전 기관은 수 차례에서 다른 타 시·도 보다 적은 만큼 2010년까지 이전을 완료한다는 복안이다.

전남도는 7월~8월 두달 동안 이전 대상 기관들과 개별 협의를 벌인 뒤, 9월말에 이전협약(중앙정부+전남도+이전대상 기관)을 체결할 예정이다. 공공기관 이전완료 및 혁신도

시 완공은 2012년까지로 잡고 있다.

시·도는 이와 함께 이전대상 기관 및 노동조합으로부터 불편사항·개선 요구사항을 광범하게 수렴해 시·도 행정력과 시도민 운동으로 이를 최대한 개선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부도 공공기관 이전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각종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우선 이전의 가장 큰 관건인 기존사옥 매각과 신사옥 매입을 적극 도울 계획이다. 기존 사옥 매각은 원칙적으로 각 기관이 자체적으로 해결해 이전 지원으로 충당해야 하지만 오랫동안 막아온 부지가 이뤄지지 않을 시에는 한국토지공사는 시가 기준으로 매입해주기로 했다. 토지공사는 매입시 취·등록세가 면제된다. 또 새 사옥 마련시 재원이 부족할 때에도 정부가 부족액을 지원하기로 했다.

새 사옥 매입시에도 취·등록세가 면제되며 재산세도 매입 뒤 5년간은 전액, 그 후 3년간은 50%가 감면된다.

또 이전뒤 업무 수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방 이전 민간기업에 준하는 법인세 감면 혜택(5년간 100%, 그후 2년간 50% 감면)을 준다.

직원들의 내집 마련도 적극 지원한다. 청양통장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매입이 경우에는 임대주택에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독도로 할 방침이다.

또한 주택 구입과 전세 자금을 장기 저리로 응자해 줄 계획인데 구체적 지원대상과 대출한도 등은 이전 시기에 맞춰 결정하기로 했다. 이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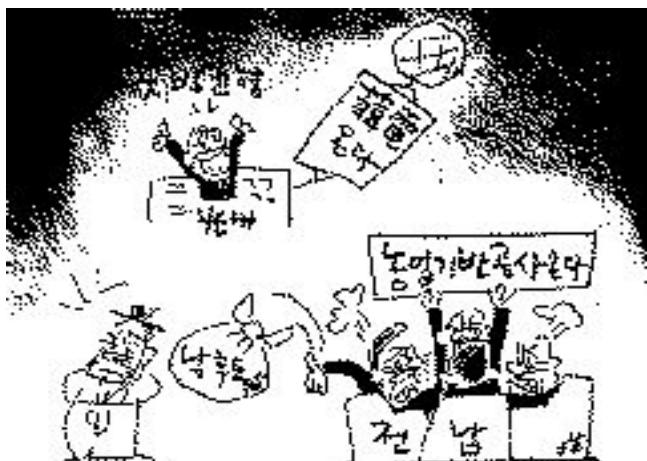
▲직원용 주택을 건설할 시 공공택지내 용지 우선 공급 ▲기술사 건립 비용 국민주택기금에서 한시적 지원 ▲구택 매입시 취·등록세 면제 등

의 방안도 강구되고 있다. 가족 전원의 이주를 권장하기 위해 거주 환경 개선에도 힘을 기울이기로 했다.

/채희증기자 chae@kwangju.co.kr

## 光日만정

- 김종우



한쪽은 지방균열이라지?!

### 與 초대 사무총장에 배기선씨



열린우리당은 24일 오후 국회에서 문희상 의장 주재로 중앙위원회의를 열어 현행 사무처장을 겸하는 김성우를 사무총장으로 격차시키고, 배기선 의원을 원임했다.

대법원 2부는 24일 김호준 전 보성그룹 회장에게서 청탁 등 대가로 2억 8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에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여자가 막연한 기대감 속에 금품을 주었을 뿐 특정한 부탁을 한 사실이 없다면 알선수재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각 공공기관의 인원과 지방세 납부 실적, 예산

### 나라종금 돈 수수 염동연 의원 무죄

대법원 2부는 24일 김호준 전 보성그룹 회장에게서 청탁 등 대가로 2억 8천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 등) 등으로 기소된 열린우리당 염동연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여자가 막연한 기대감 속에 금품을 주었을 뿐 특정한 부탁을 한 사실이 없다면 알선수재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각 공공기관의 인원과 지방세 납부 실적, 예산

### ■ 이전기관 배치기준은

이번 공공기관 이전은 정부가 지난해 1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제정, 이전사업에 착수하지 1년 6개월만에 시행됐다. 이 특별법이 정하고 있는 공공기관 수는 전국적으로 총 410개이며 이중 85%에 달하는 346개가 수도권에 있다.

이중 어떤 기관이 어떤 원칙에 의해 배치됐느냐도 관심이다.

지역산업과의 기능적 연관성·지역별 낙후도가 감안됐다는게 정부 발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각 공공기관의 인원과 지방세 납부 실적, 예산

등을 따져 점수화하고 지역 발전도도 인구증가율, 1인당 소득수준, 재정자립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역시 수치로 산출했다.

이같은 기준에 따라 선정된 상위 10개 기관은 과급효과가 큰 대규모 기관으로 분류돼 수도권과 충남, 대전, 제주를 제외한 지역에 지역 산업 연관성을 고려해 끌고 놓려눠졌다. 한국전력이 광주에 배치된 것은 경쟁도시 윤산이 1인당 소득세 전국 1위로 광주보다 발전도가 높다는 점이 고려됐다.

이 밖에 '관광1번지'라는 점이

고려돼 한국관광공사는 강원도에, 증권선물거래소 등 금융기관이 이미 이전한 부산에는 자산관리공사 등이 배치됐다.

전남의 경우 낙후도를 감안하면 당초 요구한 주택공사를 배정받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정부는 이른바 '빅4'(한전·주공·토공·도공)를 영호남에 균형한다는 산술적 평론론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나머지 166개 기관들은 최대한 기능군으로 끊어 함께 이동시켰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김석원기자 sykim@kwangju.co.kr

### 한정승인 공고

법 정부(570902-1087311) 삼속에 대한 한정승인에 따른 체권자에 대한 공고, 최근에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기기공·전력거래소의 지난해 지방세 납부액은 총 197억원, 이전인구는 총 1천577명이며, 예산은 30조 2천81억원 규모다.

광주시가 분석한 이를 3개 기관의 이전에 따른 단계별 지역 과급효과는,

법 정부(570902-1087311) 삼속에 대한 공고, 최근에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기기공·전력거래소의 지난해 지방세 납부액은 총 197억원, 이전인구는 총 1천577명이며, 예산은 30조 2천81억원 규모다.

광주시가 분석한 이를 3개 기관의 이전에 따른 단계별 지역 과급효과는,

법 정부(570902-1087311) 삼속에 대한 공고, 최근에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기기공·전력거래소의 지난해 지방세 납부액은 총 197억원, 이전인구는 총 1천577명이며, 예산은 30조 2천81억원 규모다.

광주시가 분석한 이를 3개 기관의 이전에 따른 단계별 지역 과급효과는,

법 정부(570902-1087311) 삼속에 대한 공고, 최근에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기기공·전력거래소의 지난해 지방세 납부액은 총 197억원, 이전인구는 총 1천577명이며, 예산은 30조 2천81억원 규모다.

광주시가 분석한 이를 3개 기관의 이전에 따른 단계별 지역 과급효과는,

법 정부(570902-1087311) 삼속에 대한 공고, 최근에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기기공·전력거래소의 지난해 지방세 납부액은 총 197억원, 이전인구는 총 1천577명이며, 예산은 30조 2천81억원 규모다.

광주시가 분석한 이를 3개 기관의 이전에 따른 단계별 지역 과급효과는,

법 정부(570902-1087311) 삼속에 대한 공고, 최근에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기기공·전력거래소의 지난해 지방세 납부액은 총 197억원, 이전인구는 총 1천577명이며, 예산은 30조 2천81억원 규모다.

광주시가 분석한 이를 3개 기관의 이전에 따른 단계별 지역 과급효과는,

법 정부(570902-1087311) 삼속에 대한 공고, 최근에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기기공·전력거래소의 지난해 지방세 납부액은 총 197억원, 이전인구는 총 1천577명이며, 예산은 30조 2천81억원 규모다.

광주시가 분석한 이를 3개 기관의 이전에 따른 단계별 지역 과급효과는,

법 정부(570902-1087311) 삼속에 대한 공고, 최근에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기기공·전력거래소의 지난해 지방세 납부액은 총 197억원, 이전인구는 총 1천577명이며, 예산은 30조 2천81억원 규모다.

광주시가 분석한 이를 3개 기관의 이전에 따른 단계별 지역 과급효과는,

법 정부(570902-1087311) 삼속에 대한 공고, 최근에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기기공·전력거래소의 지난해 지방세 납부액은 총 197억원, 이전인구는 총 1천577명이며, 예산은 30조 2천81억원 규모다.

광주시가 분석한 이를 3개 기관의 이전에 따른 단계별 지역 과급효과는,

법 정부(570902-1087311) 삼속에 대한 공고, 최근에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기기공·전력거래소의 지난해 지방세 납부액은 총 197억원, 이전인구는 총 1천577명이며, 예산은 30조 2천81억원 규모다.

광주시가 분석한 이를